

지방자치·종합

민주 공천 '친노·시민사회' 대거 도전

대표경력에 '노무현' 131개, '김대중' 29개, '박원순' 26개

광산을 이용섭·광양 우윤근 '나홀로' 신청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 공천 신청을 마감한 결과 친노(친 노무현) 인사와 시민사회 인사들이 대거 등장한 점이 눈에 띈다. 협의원 중에서는 5명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2명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비례대표는 15명 중 8명이 불출마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전체 39명의 의원 중 15명 가량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대표 경력 '친노-DJ-박원순'=공천 신청 현황을 보면 친노(親盧)가 당의 대세로 떠올랐다. 총 713명 후보의 대표경력 2개 중 '노무현' 내지 '참여정부' 직한이 들어간 사례가 131개로 가장 많았다. 친노 인사들은 지난 2008년 18대 총선 때만 해도 이명박 정부로의 정권교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세력으로 낙인 찍혔지만, 이번

총선을 앞두고 가장 매력있는 경력에 포함될 만큼 각광을 받고 있다. 대표경력은 여론조사 때 후보를 소개하는 말로 사용되거나 때문에 후보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들어간 경력은 29개로 2위였다. 3위는 '박원순' 관련 경력이 26개나 돼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시민사회 출신으로는 이학영 전 YMCA 사무총장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지역구는 지도부 결집에 맡긴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선 전 시민사회연대회의 공동대표, 남요원 전 한국 민예총 사무총장, 유문종 전 한국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도 시민사회 출신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공천심사를 위한 여론조사 때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름이 포함된 경력은 후보소개용 경

력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해 박 시장 관련 경력을 사용한 후보자들이 난감해하고 있다.

◇친노 그룹·시민사회 인사 대거 출전=참여정부의 친노 인사들도 대거 공천경쟁에 뛰어들었다. 아원의 대선 주자군인 문재인 상임고문이 출마한 부산의 경우 문성근 국민의 명령 대표, 박재호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전재수 전 청와대 제2부속실장, 최인호 전 청와대 비서관, 김인희 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참여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인사들만 해도 10명 가량이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중에서는 유인태 전 정무수석, 이해성 전 홍보수석, 박남준 전 인사수석, 전해철 전 민정수석, 윤승용 전 홍보수석 등이 대표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을 공천

을 신청했다.

민주통합당 출범 때 합류한 시민통합당 출신 인사들도 주목받고 있다. 시민사회 출신으로는 이학영 전 YMCA 사무총장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지역구는 지도부 결집에 맡긴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선 전 시민사회연대회의 공동대표, 남요원 전 한국 민예총 사무총장, 유문종 전 한국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도 시민사회 출신이다.

◇나홀로 출마=민주통합당의 4·11 총선 공천 신청 마감 결과 지역구에서 나홀로 출마도 눈에 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각각 1곳이 한 명씩 공천 신청을 했다. 광주에서는 광산을 의 이용섭 의원이 나홀로 출마했고, 전남에서는 광양의 우윤근 의원만이 공천 신청을 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사실상 공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 PK 여론조사 선전에 고무

문재인·문성근·김경수, 새누리 후보에 앞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오차범위 안팎이긴 하지만 거대한 장벽으로만 여겨졌던 PK에서 해볼 만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보고 반색하고 있다.

중앙당 관계자는 "지역경제의 몰락, PK 소외감에다 이명박정부에 서 주진한 국책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가 민주당에 기회를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하지만, 기대하기엔 아직은 이르다며 낙관론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더 우세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특히 여론조사 상 20~30%에 달하는 무응답층의 상당수는 새누리당 지지층일 가능성이 큰데다 선거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지역감정을 부추길 수 있어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선심성 공약 남발 표(票)풀리즘 우려”

경제학 교수·경제 전문가 95명 중단 요구

박주선 “총선 여야공통공약 18대서 통과시키자”

4·11 총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의 '선심성 공약 남발'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학 교수와 경제분야 전문가 등 95명이 13일 여야 정치권에 선심성 공약 남발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박주선(광

주동구) 의원은 각 정당이 제시한 19대 총선 공약 중 이견이 없는 공약은 18대 국회 남은 일기 내에 통과시킬 것을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대학 교수 등 경제분야 전문가 95명은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

야가 4·11 국회의원 선거와 12·19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파주기식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국가 경제를 위해 즉각 멈출 것을 촉구했다.

박주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9대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내놓는 정책 공약에 대해 공약 베끼기, 선심성 공약이란 비판을 제기하는 이유는 그동안 선거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정치권의 잘못이 크

/최권일기자 cki@·연합뉴스

야가 4·11 국회의원 선거와 12·19 대

다"라며 "국민과 약속이 공약을 진정으로 지킬 의지가 있다면, 18대 국회 임기 내에 관련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최근 한나라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로 상향조정 ▲만 0~5세 전면 무상교육 ▲고교 의무교육 전면 실시 ▲전월세 대출이자 감경 ▲빈곤아동 수당·주거급여 지급 ▲직불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각종 복지공약은 그동안 민주통합당이 주장했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한나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관련 법률안들을 조속히 마련해 18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은 법안 발의 과정에서도 5·18 단체 내부 문제를 광경으로 법안 발의를 저지시키거나 또 다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법안 통과를 저지시키고 있다"며 "한명숙 대표는 우리가 보낸 면담요청 공

문에 대해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통합당이 5·18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계승하겠다면 법률안이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요구가 관찰될 때 까지 민주통합당의 5·18 묵지 참배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5·18 공추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해 말 국회의원 27명의 서명으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민주통합당의 무성의한 태도 때문에 유공자의 속원인 법률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은 법안 발의 과정에서도 5·18 단체 내부 문제를 광경으로 법안 발의를 저지시키거나 또 다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법안 통과를 저지시키고 있다"며 "한명숙 대표는 우리가 보낸 면담요청 공

문에 대해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통합당이 5·18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계승하겠다면 법률안이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요구가 관찰될 때 까지 민주통합당의 5·18 묵지 참배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5·18 공추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해 말 국회의원 27명의 서명으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민주통합당의 무성의한 태도 때문에 유공자의 속원인 법률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은 법안 발의 과정에서도 5·18 단체 내부 문제를 광경으로 법안 발의를 저지시키거나 또 다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법안 통과를 저지시키고 있다"며 "한명숙 대표는 우리가 보낸 면담요청 공

문에 대해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통합당이 5·18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계승하겠다면 법률안이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요구가 관찰될 때 까지 민주통합당의 5·18 묵지 참배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5·18 공추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해 말 국회의원 27명의 서명으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민주통합당의 무성의한 태도 때문에 유공자의 속원인 법률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은 법안 발의 과정에서도 5·18 단체 내부 문제를 광경으로 법안 발의를 저지시키거나 또 다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법안 통과를 저지시키고 있다"며 "한명숙 대표는 우리가 보낸 면담요청 공

문에 대해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통합당이 5·18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계승하겠다면 법률안이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요구가 관찰될 때 까지 민주통합당의 5·18 묵지 참배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5·18 공추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해 말 국회의원 27명의 서명으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민주통합당의 무성의한 태도 때문에 유공자의 속원인 법률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은 법안 발의 과정에서도 5·18 단체 내부 문제를 광경으로 법안 발의를 저지시키거나 또 다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법안 통과를 저지시키고 있다"며 "한명숙 대표는 우리가 보낸 면담요청 공

문에 대해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통합당이 5·18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계승하겠다면 법률안이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요구가 관찰될 때 까지 민주통합당의 5·18 묵지 참배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5·18 공추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해 말 국회의원 27명의 서명으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민주통합당의 무성의한 태도 때문에 유공자의 속원인 법률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은 법안 발의 과정에서도 5·18 단체 내부 문제를 광경으로 법안 발의를 저지시키거나 또 다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법안 통과를 저지시키고 있다"며 "한명숙 대표는 우리가 보낸 면담요청 공

문에 대해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통합당이 5·18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계승하겠다면 법률안이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요구가 관찰될 때 까지 민주통합당의 5·18 묵지 참배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5·18 공추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해 말 국회의원 27명의 서명으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민주통합당의 무성의한 태도 때문에 유공자의 속원인 법률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은 법안 발의 과정에서도 5·18 단체 내부 문제를 광경으로 법안 발의를 저지시키거나 또 다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법안 통과를 저지시키고 있다"며 "한명숙 대표는 우리가 보낸 면담요청 공

문에 대해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통합당이 5·18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계승하겠다면 법률안이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요구가 관찰될 때 까지 민주통합당의 5·18 묵지 참배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5·18 공추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해 말 국회의원 27명의 서명으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민주통합당의 무성의한 태도 때문에 유공자의 속원인 법률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은 법안 발의 과정에서도 5·18 단체 내부 문제를 광경으로 법안 발의를 저지시키거나 또 다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법안 통과를 저지시키고 있다"며 "한명숙 대표는 우리가 보낸 면담요청 공

문에 대해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통합당이 5·18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계승하겠다면 법률안이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요구가 관찰될 때 까지 민주통합당의 5·18 묵지 참배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5·18 공추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해 말 국회의원 27명의 서명으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민주통합당의 무성의한 태도 때문에 유공자의 속원인 법률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은 법안 발의 과정에서도 5·18 단체 내부 문제를 광경으로 법안 발의를 저지시키거나 또 다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법안 통과를 저지시키고 있다"며 "한명숙 대표는 우리가 보낸 면담요청 공

문에 대해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통합당이 5·18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계승하겠다면 법률안이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요구가 관찰될 때 까지 민주통합당의 5·18 묵지 참배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5·18 공추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해 말 국회의원 27명의 서명으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민주통합당의 무성의한 태도 때문에 유공자의 속원인 법률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은 법안 발의 과정에서도 5·18 단체 내부 문제를 광경으로 법안 발의를 저지시키거나 또 다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법안 통과를 저지시키고 있다"며 "한명숙 대표는 우리가 보낸 면담요청 공

문에 대해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통합당이 5·18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계승하겠다면 법률안이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요구가 관찰될 때 까지 민주통합당의 5·18 묵지 참배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5·18 공추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해 말 국회의원 27명의 서명으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민주통합당의 무성의한 태도 때문에 유공자의 속원인 법률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은 법안 발의 과정에서도 5·18 단체 내부 문제를 광경으로 법안 발의를 저지시키거나 또 다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법안 통과를 저지시키고 있다"며 "한명숙 대표는 우리가 보낸 면담요청 공

문에 대해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통합당이 5·18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계승하겠다면 법률안이 18대